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 참여 지자체 선정

- 기초지자체 4개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개인예산제: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올해 모의적용 연구는 작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하여 시범사업(24~25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 기초모델 개발 → ('23) 모의적용 연구 → ('24~25) 시범사업 → ('26) 본사업

참여 기초지자체 선정은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미이용자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분배) 대도시: 광역시도의 구, 중소도시: 도지역의 시, 농어촌: 도지역의 군

4개 참여 기초지자체에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급여유연화 모델(서울 마포구, 충남 예산군)과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을 모의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며,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5월 중에 참여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경일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정찬도 (044-202-3287)
<담당부서>	한국장애인개발원 개인예산제 사무국	책임자	부 장	김경란 (02-3433-0717)
		담당자	팀 장	유명해 (02-3433-0708)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개요

1 추진배경 및 방향

- (배경)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장애계의 오랜 요구가 반영되어 당선인 공약에 개인예산제 채택된 후 국정과제로 선정
- (방향)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당사자 욕구에 따라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부여

* '23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권자 14.6만명(급여이용자 12.7만명, 미이용자 1.9만명)

2 사업모델

- (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공공*·민간서비스** 구매·활용

* (공공서비스)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 (민간서비스)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 (지급방식) 바우처 사업 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하되, 시스템 구축 시 까지(~'26)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

* 사전 수령 없이, 이용자가 지원계획에 따라 지출하고 사후 정산을 거쳐 급여 지급

-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 활동지원 급여 일부(2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

-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

*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원사

3 향후 계획

- ('23년) 사업모델 모의적용 연구 및 시범사업 모델 도출
- ('24~25년) 1, 2차년도 시범사업, 입법 추진,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26년) 본사업, 급여 단계적 확대 추진